

금감원, 19개 금융사 CEO 소집… “소비자 보호” 최우선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강화 논의
홍콩 ELS 사태 거론 경영진 역할 강조
CCO 독립성 확보 등 모범관행 제시

금융감독원이 9일 은행·보험·여신전 문금융업·증권 등 19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논의했다. 홍콩 ELS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한계를 계기로 금감원은 이사회와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권한 확대,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금융지주 책임 강화 등을 담은 ‘모범관행’을 공개하며 경영진의 역할을 강조했다.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박지선 부원장보 등 금감원 수뇌부와 업권별 CEO 19명이 참석했다. 취임 직후 업권별 간담회와는 달리 소비자보호를 단일 의제로 CEO 전원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단 한 번의 금융사고만으로도 신뢰는 무너진다”며 “소비자보호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강



이찬진 금감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화돼야 리스크 관리와 기업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ELS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이 이날 제시한 모범관행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주재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단기 실적에 얽매지 않는 소비자 이익을 중심으로 한 KPI 개편, 금융지주의 그룹 차원 관리·감독 강

화가 담겼다.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전략을 별도 안건으로 다루고, 내부통제·상품심사·민원심의 등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이사 영입이나 소위원회 설치도 권고된다.

실태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주요 75개사 중 40% 이상이 성과보상체계 등 핵심 안건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지 않았고, 내부통제위원회가 서면 개최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CCO의 위상

은 조직 내 평균 서열 64% 수준에 불과했고, 임기도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전담인력 역시 회사별 평균 10명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민원·분쟁은 2022년 8만7000건에서 지난해 11만6000건으로 30% 가까이 늘며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보여줬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KPI 개편 시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에 사전협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의 가중치를 높인다. 우수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형식적 운영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CEO들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각사 경영체계를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금감원도 모범관행을 기준으로 개선을 이끌고,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민원·분쟁,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내년 3월10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고용장관 “6개월 간 준비 거쳐
지침과 매뉴얼 정교하게 마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인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가동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 표준모델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면 ‘삼성바이오 1.8조…’서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최대 생산시설 확보
의약품 수요 선제대응 성과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업용 설비 78만 리터와 임상용 설비 4000 리터 등 총 78만 4000리터의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올해 4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5공장은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이면서 제2바이오캠퍼스의 첫 번째 공장이다.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에는 6~8공장이 세워진다. 5공장은 기존 1~4공장의 최적 운영 사례를 집약해 18만 리터 규모로 구축됐다. 또 유연 설비 설계를 적용해 고객사 요청을 적극 반영하며 새로운 첨단 기술을 능동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생산 역량과 기술력뿐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도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췄다. 5공장의 경우, 제조 실행 시스템(MES) 등을 설치함으로써 생산 공정을 고도화했다.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며 자율주행 운송 로봇, 자동화 창고, 화학물질 자동 공급 체계 등으로 효율성까지 강화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9월 기준,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규제 기관에서 획득한 제조 승인은 총 382건이고 각 규제 기관의 심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GDDR7 공급량 두배 확대

엔비디아, 中 H20 출하 불확실

삼성, 설비확보·GDDR7 생산 확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GDDR7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망 내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GDDR7은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이지만 인공지능(AI) 가속기 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만큼 성능이 높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사 협력 구도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GDDR7 주문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지정학적 압력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저사양 인공지능 칩 ‘H20’ 출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신규 칩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



삼성전자의 GDDR7 D램. /삼성전자

에 맞춰 GDDR7 생산을 확대하고 해당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부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그간 게이밍 제품에만 GDDR7을 사용해 왔는데 최근 서버용 ‘RTX프로 6000블랙웰 서버 에디션’으로 응용처를 확장했다. 서버 구입·운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품군을 다각화하려는 방침이다.

또한 엔비디아의 AI GPU는 가격이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탑재했으나 B40 AI GPU에는 삼성전자의 GDDR7이 적용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미국의 對중국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초당 1.8TB(테라바이트)로 제한된 미국 정부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HBM 대신 GDDR7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GDDR7은 HBM 대비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뚜렷하다. HBM이 1GB당 130~170달러 수준인데 비해 GDDR7은 5~8달러 가량이다.

미국 증권사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GDDR7의 수요를 올해 200만대, 내년 500만대로 진단했다. 중국 고객들이 최근 HBM이 없고 GDDR7을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B40 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B40이 100만대 출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매출 이익은 3억8400만달러(약 5340억원)로 추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라 올해 B40의 수요가 200만대로 상향된다면 삼성전자의 수혜 규모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그래픽 D램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도 그래픽 D램을 공급받고 있으나 가장 많은 물량은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GDDR7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 향후 HBM 납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공급을 위한 HBM 4 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사와의 계약 건은 언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지만, 다만 업계에서는 그래픽카드 수요 증가와 AI 확산에 따라 GDDR7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증설 요청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KT 소액결제 피해 ‘눈덩이’… 정부, 칼 빼들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신속 원인파악, 피해확산 방지 최선”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가 경기 광명에 이어 서울 금천·영등포, 경기 부천으로 확산하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

상 파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일 오후 7시16분께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당일 저녁 7시50분경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회사를 방문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기술적·정책적 조안을 구하는 등 철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현정 기자 hjk1@



KT 소액 결제 피해가 광명에서 금천·영등포·부천으로 번지자, 과기정통부가 9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구글 제미니로 생성한 이미지